

## 위원회 합의

# 산업안전보건위,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합의

- 중소기업 산재예방사업에 매년 정부예산 확대
- 중장기 과제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검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전형배 강원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4.27.(수) 11:00 위원회 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

2020. 4. 27. (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한국노동연구원  
산안안전보건위원회



당초 위원회는 지난 '20.3.2. 열린 34차 전체회의에서 참가자 만장일치로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다만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20.4.28.)을 함께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하루 전인 27일로 합의문 공개 일정을 잡았다.

합의문에는 과로사 방지대책을 비롯해 △플랫폼노동 등 서비스부문의 신종 유해위험 요인 파악과 법·제도 개선 △중소기업 산재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매년 증액 △산업안전보건행정 전문성 제고 등 노사정의 일치된 입장이 포함됐다.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노동자,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합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합의문 제목을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으로 정했다.

### | 위원회 합의 | 01-06

산업안전보건위,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합의

보건의료위원회,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 도출

### | 3개 업종 긴급간담회 | 06-07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개 업종(호텔·항공·건설) 노사정 긴급 간담회 추진

### | 위원회 단신 | 07-08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방안)

위원회 논의 막바지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두고 상당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럼에도 노·사·정·공익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이어간 결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

주요 내용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과 세부계획 수립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 검토를 위한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실태조사 추진과 노사정 참여 TF/T 구성 등이다.

**(서비스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방안)** 노사정은 플랫폼노동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과 기존에 없던 신종 유해위험요인의 출현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서비스부문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시행 △중소사업장 지원을 위한 예산·인력 확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전문가 참여 TFF 구성과 행정집행체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방안)** 노사정은 기업 규모에 따른 ‘안전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노사정은 산재 발생 위험이 큰 중소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산재예방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안전시설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합의한 ‘산재예방 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산재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개편 방안)** 노사정은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과감한 시스템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교육훈련·경력관리 시스템(인사구조) 개편 등을,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조직구조) 개편을 검토·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과로사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함으로써 이번 합의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에만 85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이번 합의내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적 대화’는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합의의 이행이다.

전형태 위원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방역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거나, 업무하중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를 호소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건강장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서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sic**

담당 구은희 전문위원

##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첫째, 최근 서비스업에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기인한 유해위험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업 중소사업장의 영세성과 취약노동자의 증가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제와 행정집행체계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나 중소기업 산재예방사업 및 법제도·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의 재정 기여 또한 미미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안전보건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시스템 개편,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이를 해결하는 제도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넷째, 지금의 산업안전보건행정 인사구조 및 조직구조는 전문화·고도화·복잡화되어 가는 산업안전보건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 있는 행정역량과 행정의 효과성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산업안전보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1 서비스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방안

- 1-1. 정부는 서비스업에 확산하는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구조·형태와 서비스업 특성에 기인하는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며,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1-2. 정부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확충한다.
- 1-3. 정부는 서비스종사자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운영하고, 책임 있는 행정집행체계를 구축한다.

### 2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방안

- 2-1.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산재예방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2-2. 정부는 위험성평가·감독·교육 등에 대해 중소기업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산재예방정책과 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 법규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도·준수도 제고를 위한 법 기준 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물량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시스템을 적극 개편한다.
- 2-3.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산재예방정책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노·사·정·전문가 중심 태스크포스팀(TFT)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 2-4. 정부는 2006년과 2008년 노사정이 합의한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산재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계를 구축한다.

### 3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방안

- 3-1. 노사정은 과로사 및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이하 '과로사'라 함)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3-2. 노사정은 과로사 방지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실태조사 태스크포스팀(TFT)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운영한다.
- 3-3.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은 기업에 대한 단편적·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제도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개편 방안

- 4-1. 산업안전보건행정의 구성원들이 직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채용·교육훈련 및 경력관리 시스템(인사구조)을 마련한다.
- 4-2.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조직구조) 개편을 검토·추진한다.
- 4-3. 인사·조직구조 개편은 제재 위주의 사후감독을 지양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자율적 재해예방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및 행정집행체계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

2020. 4. 2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위원회 합의

# 보건의료위원회,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 도출

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 3.19.(목)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이 의료진을 포함한 보건의료 및 방역 인력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위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노사정의 인식 공유가 이뤄진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주요 합의내용은 △안전한 의료체계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의료공급체계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의료분야와의 협력 강화 등이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노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진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시간 노동에 의한 업무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진료현장에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의료기관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감원을 자제하면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진료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각종 비용과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노사정은 대구·경북 등 전국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공급체계 위기 극복)** 노사정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공급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각급 의료기관에서 감염(의심)환자 진료동선 구분, 수시 방역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비 교육·훈련 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



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조기에 지급하거나 용자를 지원하는 등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의료분야와의 협력 강화)** 노사정은 민간·공공부문의 보건자원을 망라하는 혁신적인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염병을 포함한 재난의 발생 초기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며, 또 다른 감염병 사태 발생에 대비해 공공·민간의료기관 자원(인력·병상 등)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3.6.(금) 도출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대표들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자발적 노력을 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나아가 합의는 위기 극복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의 장기적 계획을 담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체계가 나아갈 방향까지 일정정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위원회는 5월 중 이 합의에 대한 노사정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여 지속적인 대응 및 논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slc**

담당 조현민 전문위원

##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는 당면 위기상황을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환자에게는 안전한 진료를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정이 실천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1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한 의료환경 보장

- 1-1. 노사정은 보건의료 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 1-2. 노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진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시간 노동에 의한 업무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협력한다.
- 1-3. 정부는 코로나19 진료현장에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2 보건의료인력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2-1.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나 응급·중증환자 발생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 2-2.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진료로 발생한 각종 비용과 손실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한다.
- 2-3. 노사정은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강구한다.

### 3 의료공급체계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노력

- 3-1. 노사정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공급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2. 노사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급 의료기관에서 감염(의심)환자 진료동선 구분, 수시 방역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아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비 교육·훈련 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
- 3-3.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조기에 지급하거나 용자를 지원하는 등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 4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의료분야와의 협력 강화

- 4-1. 노사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공부문의 보건자원을 망라하는 혁신적인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노사는 지역별 선별진료소 설치 및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등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다.
- 4-2. 정부는 감염병을 포함한 재난의 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며, 또 다른 감염병 사태 발생에 대비해 공공·민간의료기관 자원(인력·병상 등)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다.

2020년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 3개 업종 긴급간담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개 업종(호텔·항공·건설) 노사정 긴급 간담회 추진

## □ 간담회 개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텔업·항공업·건설업 노사정 간담회’가 시작됐다. 특히 ‘호텔업·항공업·건설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산업위기에 처해 있으며,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업종이라 할 수 있다. 호텔업의 경우 코로나19 전·후 예약 취소로 인한 손실액이 상당하며, 항공업의 경우 본격적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의 중단 등에 따른 고용 및 생계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는 호텔업을 시작(20.4.10.(금))으로 항공업(20.4.14.(화))·건설업(20.4.24.(금))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책건의 및 정부의 수용여부·노사의 협력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 호텔업 노사정 간담회 결과



호텔업 간담회는 '20.4.10.(금) 진행되었으며, 호텔업 피해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제안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계는 호텔 등급심사 유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제안했고, 경영계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 적용 및 사회보험 감면, 관광진흥기금(운영자금) 증액,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감면, 호텔업이 아닌 호텔산업으로의 전환 검토 등을 요청했다. 논의된 내용은 정리하여 해당 부처에 답변을 요청하고, 추가 간담회는 답변 내용 확인 및 추가 제안 내용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참석자>** 노동계 : 전주환(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조승원(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 경영계 : 김영문(한국호텔업협회 부회장), 정오섭(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 / 정부 : 조현래(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 □ 항공업 노사정 간담회 결과

항공업 간담회는 '20.4.14.(화)에 진행됐으며, 업종분류 상 '항공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특별고용지원 업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상조업사와 지상조업협력사 등 인력파견업체 상황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노동계는 주요하게 지상조업사와 지상조업협력사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적용, 계류장 사용료 면제 연장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대형 항공사에 대한 차별적 조치 지양, 대출보증 등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공적 지원 증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현재 지상조업사와 지상조업협력사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으며, 계류장 사용료 면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노·사는 정부의 대책 마련과 위기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추가 간담회를 제안하기로 했다.

**<참석자>** 노동계 : 조상훈(한국공항 노동조합 위원장), 원준철(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정책차장), 다수의 협력사 노조 및 승무원 노조 위원장 / 경영계 : 김광옥(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 정부 : 최태호(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문석준(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

## □ 건설업 노사정 간담회 결과

건설업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설업 피해현황 공유 및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4.24.(금) 개최되었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제 지침 폐기, 코로나19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건설노동자 생계지원대책, 내국인·청년층 고용유도

정책 적극 추진 등을 요청했고, 경영계는 포괄임금제 현행 유지, 휴업수당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상 어려움,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탄력근로시간제 1년 단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노사의 제안서 및 의견서, 간담회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해당부처는 소관 과와 협의해서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정책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참석자>** 노동계 : 육길수(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윤삼명(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 본부장) / 경영계 : 강해성(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임기순(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실장) / 정부 : 최임락(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조오현(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임경희(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무관) **esc**

## 위원회 단신

###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코로나19’ 사태로 노선버스업은 승객과 매출액이 각각 70%씩 감소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밀집산업의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악화와 더불어 고용안정성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노선버스 노사는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안을 제안하였고, 버스운수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4.14. 간사회의를 통해 관련사항을 논의하였다. 노선버스 노사는 재난사태 하에서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 운행기준 및 대응 매뉴얼 마련, 밀집산업에서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선버스 인프라 개

선, 버스운수 종사자 고용보장 및 정부 경영·고용안정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고, 관련 부처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제7차 전체회의(‘20.2.19.) 이후 차기 전체회의를 5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며, 그 동안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 왔다.



담당 김명환 전문위원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제30차-제3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대표제 정비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실무적 입장에서 노사위원이 근로자대표제의 개정 범위와 내용에 관해 각각 발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익위원들이 공통된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제36차 전체회의(4.29) 노사위원이 각자의 단체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최종안을 기초로 집중 토론을 하였다. 근로자대표 선출절차와 권한을 법률로 명시해

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노사의 공감대가 확인되었으나 그 외에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유급활동 시간 보장, 근로자참여법과 관계 등의 쟁점을 둘러싼 이견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예정된 다음 전체회의를 연기하고 각 쟁점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 간사단회의를 먼저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11차 간사단회의가 2020년 5월 15일 개최 예정이다. 안건은 근로자대표제 관련하여 노사의 최종안과 전체 공익위원이 제시한 논의 초안에 기초한 협의이다. 이를 통해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근로자대표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담당 김미영 전문위원

## 위원회 단신

## 디지털전환과 노동의미래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9년 10월 이후 IT 인력중개 플랫폼의 규범 마련과 IT 프리랜서의 처우개선을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그동안 IT와 SW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최근에는 IT·SW 인력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발 인력과 프로젝트가 매칭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투명한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을 마련하고, IT·SW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20.5.13. 전체회의'에서 그 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 정책 과제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중심의 스마트공장을 위한 사회적 협업모델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조업의 디지털화인 스마트공장 확산은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생산방식의 변화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정은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위원회는 경영·기술 혁신과 일터혁신을 결합한 사람중심의 스마트공장 도입과 확산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일터혁신은 작업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근로생활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참여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다. 노사정은 일터혁신을 통해 노동자로 하여금 스마트 제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자율적, 자발적 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작업 동기를 고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담당 강금봉 전문위원



## 공공기관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19.11.22. 출범 이후 총 6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방안 마련과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마련을 목표로 노동이사제 추진, 윤리경영 강화, 경영투명성 강화, 임금(보수)체계 개편 논의,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기타 임금(보수)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세부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향후 위원회는 2020년도 1/4분기 정도까지 임금(보수)체계 개편 논의, 노동이사제 추진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각 주체별 입장 및 의견을 검토하여 쟁점을 정리한 연후에 주요 쟁점별 조정 협의 및 대안을 모색하고, 하반기에는 의제별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합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담당 구미현 전문위원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이하, 사안개위)는 제23차 전체회의('20.4.17.)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제5차 본위원회('19.10.11.)에서 의제별위원회를 승계 및 재가동하기로 의결한 후 열리는 첫 번째 전체회의로 논의의제 및 위원구성을 재정리하여 추진되는 사실상 2기 위원회라 할 수 있다. 제23차 전체회의에서는 운영계획(안) 및 주요 의제인 '고용형태 다양화 시대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남은 운영기간('19.10.11.~'20.10.10.)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공의회의를 통해 구체적 운영일정을 잡고 신속하게 전체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담당 송해순 전문위원



## 위원회 인사 동정

본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20.4.17.)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 인사발령 ('20.4.1.)

양정렬 (고용노동부 일반직 고위공무원)